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 '징검다리'

비핵화 합의 도출되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세부적 의제 다룰 가능성 높아... 중간에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

대북 특사에 이어 북핵 특사의 임무를 떠났던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의 임무가 마무리됐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 구체적인 진용도 갖춰지면서 본격적인 회담 준비에 돌입하게 됐다.

한반도 정세 변화 설명 임무로 중국·러시아를 방문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3박4일의 일정을 마치고 15일 오전 귀국했다. 일본을 찾았던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하루 앞선 14일 귀국했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은 함께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에게 그간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끝으로 대북 특사부터 시작돼 방미와 한반도 주변 4강국을 순회하는 특사의 여정이 일단락 됐다.

정 실장은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러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한 문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고 방문 성과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중·러는 우리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해나가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평화와 안정의 모멘텀을 계속 살려나가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사단의 방문을 통해 미·중·

러·일 한반도 4강국 모두 현재 전개되고 있는 남북대화 국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이 확인됐다. 자신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남북·북미로 이어지는 대화국면에서 저마디의 계간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자신이 대북해법으로 주장해 온 '쌍중단(雙中斷·북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쌍개병행(雙軌並行·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동시진행)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미·일 삼각공조를 통한 강한 대북 제재·압박을 주장하던 일본도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자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대화에 관승하는 모양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한 달 뒤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의 '리트머스' 시험지 성격이 짙다. 과거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끝난 것과 달리 연속된다는 점에서 '징검다리' 역할이 될 전망이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한·미 공통의 목표가 분명한 상황에서 한달의 시간차를 두고 이뤄지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은 어떤 식으로든 연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큰 틀에서의 비핵화와 관련된 합의가 도출되면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세부적인 의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 관계정상화와 반대급부로서 제시한 비핵화 의제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포석을 마련한다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도 나관을 짐작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한반도 정세가 다시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으로, 성급한 나관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2005년 6차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방안에 관련해 도출한 9·19공동성명과 그 바탕 위에서 이뤄진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3차 또는 4차 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흐지부지 된 바 있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제재를 전면해제하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이루면 평화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며 '先 정상화, 後 핵폐기'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은 '先 핵폐기, 後 평화협정 협상' 조건을 내걸며 맞섰다. 결국 북미 간 입장 차 탓에 비핵화 논의는 무산된 바 있다.

때문에 이같은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의 중재 외교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한 것에 이어 또 한 번의 중재력이 요구된다.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의제에 있어 북미간 인식의 차이를 좁혀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4월 말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기업인 대표와의 조찬간담회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중간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경험이라고, 그때 얻은 여러가지 판단, 이런 것들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 우리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함께 지혜를 모으는 한미 정상회담이 중간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이 총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추정하는 그런 단계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김광수 제안 '청년 의무공천제'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

국회 김광수 의원이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안하고 대표발의 예정인 '청년 의무공천제법'(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이 16일 개최된 제17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

이날 당론으로 채택된 청년의무공천제법은 2010년 도입된 '여성의무공천제'처럼 국회의원 지역구에 청년후보를 1명 이상 공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민주당은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20·30세대들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2030 청년국가건강검진법'(2016.8.18. 김광수 대표발의)도 '청년 의무공천제법'과 함께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청년정책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청년의 취업, 주거, 결혼, 임신 및 출산 등이 심각한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부 및 정치권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은 큰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특히, 지방의회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 지방의원의 수가 너무 적어 청년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4년 실시된 6회 지방선거만 살펴봐도 39세 미만 청년 지방의원은 3.4%, 30세 미만은 0.2%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청년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정치형성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기회를 확대하도록 조속히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 있다고 강조했다.

'2030 청년건강검진지원법'과 관련해 김 의원은 "현재 국가건강검진 체계는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은 건강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어 20~30대 청년·전업주부들이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라며 "2030세대들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포함토록 해 건강검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청년정책 법안의 민주당 당론 채택으로 청년의무공천과 2030청년세대 건강검진지원을 위한 법안이 탄력을 받게 된 만큼 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히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미래인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靑 "남북 정상회담 준비자문단 위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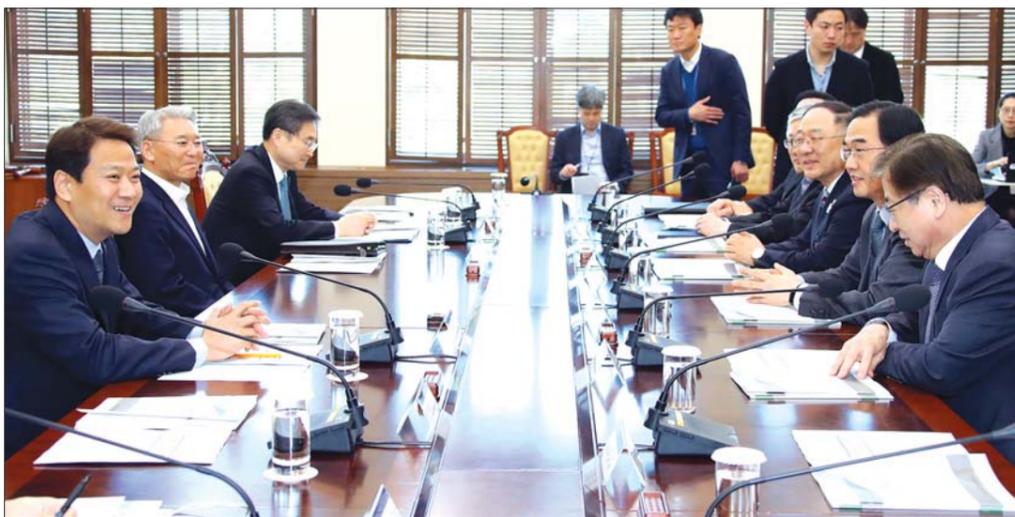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6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임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3~40명 내외의 자문단을 위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준비위원회 1차 전체회의 후 결과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임 실장은 "준비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어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기가 돼야 함을 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을 위한 의제에 집중해 준비 예정"이라 말했다.

그는 "준비위원회는 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이달 말에 추진하기로 북측에 공식 제안할 예정"이라며 "우리 측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의 평양 방문 공연을 4월초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표 단장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북측과의 판문점 실무회담을 다음 주 초 진행 예정"이라 말했다. /뉴시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첫 회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지난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준비위원회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총괄간사인 조명규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위원장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사법발전위, 홈페이지... 국민 개혁안 제안 받는다

대법원의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16일 첫 회의를 열고 전관예우 근절방안 등 논의주제를 상정했다. 또 활동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발전위(위원장 이호훈 전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1차 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부의한 4가지 1차 안건을 논의 주제로 상정했다.

안건은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 ▲전관예우 근절 방안 ▲재판 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이다.

이 위원장은 간사로 이승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하고 위원회와 전문위원 연구반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지원단을 구성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원들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세칙(안)을 토의 및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20여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했다. 전문위원들은 2개의 연구반을 구성하며, 1차 안건을 두개씩 나눠 연구할 예정이다.

사법발전위는 논의 과정을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개혁 과제를 제안받을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기로 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 중 일부는 추가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도록 운영세칙에 규정을 뒀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